

광복 100년 국민동행

2026.6.10.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

**“광복 10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과 세계동행의 과제”
토론요지**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은정

-
- 광복 100년 동행 의제를 국민동행에서 세계동행 차원으로 넓힌 비전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큰 그림으로 짚어 주신 발제에 깊이 감사함. 평화와 민주주의가 그 토대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이 위기시대가 불평등 심화, 양극화, 생태 파괴, 팬데믹, 전쟁, AI 격차 등 대내외의 경계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 만큼, 우리 안의 동행 의제와 세계와 함께하는 동행 의제가 현실진단에 있어서나 방향제시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발제 내용들은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함. 다만, 토론자는 많은 부분에서 발제자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 안의 동행 문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토론에 임하고자 함. 과거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우리 보다 앞선 나라를 벤치마킹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의 동행에 모범을 보인다면 세계는 자연히 우리의 제도,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사회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세계동행에 기여할 것임.
- 발제자가 지적한 대로 지난 80년은 빛과 동시에 그림자를 던진 세월이었음. 화염병에서 응원봉에 이르는 “권위주의 40년, 민주주의 40년” 세월 동안 한편으로 권위주의 하의 사회통제와 자본집중을 통한 ‘근대화’로 이룬 성장의 과정에도, 다른 한편으로 역동적인 시민사회운동을 통한 ‘민주화’로 이룬 헌정체제 안에도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 또한 짙게 퍼져 있음.
- ‘광복 100년 국민동행’이 내세운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그림자를 걷어내고 함께 살고 같이 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토양을 만들자는 제안일 것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참하면서 발제자가 강조한 민주회복력과 평화회복력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책임과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소박한 전제를 살펴보고자 함.
- 우선 발제자가 말한 대로, 우리사회에서 특히 민주화 이후 각종 지표상으로 볼

때 삶의 질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평등 심화, 극단적 진영갈등, 포퓰리즘, 지역소멸위기, 저출생, 돌봄 위기, 생태파괴 등등으로 ‘탈민주화’와 ‘탈인간화’가 중첩되는 파시즘의 징후까지 나타나면서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넘어 인간적 사회적 존엄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런 가운데 현실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어느 쪽도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장기적인 전망은 불확실한 가운데 저출생, 연금, 기후 등 장기미래의제들은 논의의 활력을 잃어가고, 반면 단기과제들은 특정 프레임에 쫓겨 진영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의미해야 할 입법마저 정쟁의 무기로 전락하고 있음.

- 우선 우리 사회에서 정치의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화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지금은 정치가 시민들의 대화에서 거의 배제된 지경이며,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결정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직업정치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생각에 머물게 됨.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할 때의 그런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직업정치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좋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좋은 정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함.
- 이런 관점에서 민주헌정의 새로운 의사결정 원리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는 과두제라고 볼 수밖에 없음. 선거에서의 대표성 왜곡,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 정당제도, 국회와 사법부에 비해 비대한 대통령 권한, 국민발안 등 참여 제한……. 현재로서는 새로운 의제들이 그때그때 정치 안으로 들어오고, 이를 발판으로 발제자의 말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 연합과 협치를 이루는 일이 제도의 한계로 불가능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분권과 협치에 지향점을 맞춘 헌정 개혁과 국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은 모두 헌정관련 법률들로서 헌법 개정논의의 연장선에 놓임.) 최근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30%에 육박하는 1위의 지지를 얻었다는데, 이민, 치안, 고용 등 객관적 지표는 나빠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회복되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대해서 현실보다는 체감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에 대한 신뢰고갈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기절제와 포용의 정치가 실종된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새겨야 할 것임.
- 우리 헌정 위기 때마다 나오는 논쟁 즉 제도의 문제냐? 운영(문화)의 문제냐?에 대해서는 둘을 항상 연관시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많은 제도적 이론적 쟁점들은 실천적으로 보면 결국 얼마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기관과 기관들 사이에서 협조하고 노력하느냐의 문제임. 진부한 말 같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의 각종 개혁도 해

당 구성원들이 협조하고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음.

- 앞에서 좋은 시민들의 참여가 좋은 정치를 만든다고 말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 민주헌정 관련 주제에서는 주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론화위원회나 시민회의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온건한 형태의 민주모델 제도화). 또 같은 맥락에서 직업정치인들이 모이는 여의도 공간을 넘는 '좋은 공간'도 필요함. 일상 가까운 곳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마주하여 체험 속에서 포용하고 절제하고 대화하는 미덕을 익힐 기회를 갖게 하는 좋은 공공 공간! 이를테면 쾌적한 공원, 아담한 광장, 문화센터 등 매력적인 공공장소를 늘이는 일은 시민들의 힐링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극우담론에서 청년들을 구해내는 데도 기여하리라 생각함.